

105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억울한 과징금 1/2 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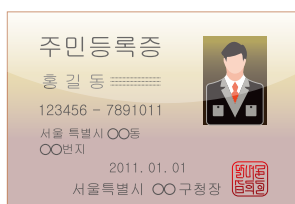
억울한 과징금, 반으로 줄었어요!

“영세 자영업자에게 500만원의 벌금은 생계를 위협하는 처벌입니다.”
PC방을 운영하는 L씨에게 지난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했던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해져 있어 K씨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기 전 꼭 신분증 확인을 해왔으나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고등학생이 나이를 속이고 일을 한 까닭에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L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덜어지게 됐습니다. 이전엔 청소년이 신분을 속였던 사실과 관계없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청소년유해업소 사업자에게 일률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 신분증을 제시했던 사실만 확실하다면 과징금과 영업정지기간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경감



개선 전

청소년이 신분을 속인 사실과 관계없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

개선 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한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기간이 1/2로 줄어듦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청소년유해업소 위반행위 행정처분 감경지침’ 제정 (여가부, '14.10월)

장사가 안돼서 영업장을 줄이는데 비용이 들다니!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속상한데, 가게를 작게 줄이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서야 원...”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Y씨는 속상했습니다. 불경기로 가게 규모를 줄이려 했지만 신고절차가 상당히 어렵단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식당 면적을 줄이려면 기존 내부구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변경된 설계도면을 작성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규모를 줄였다간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하기에 Y씨는 내부변경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운영비만 과다하게 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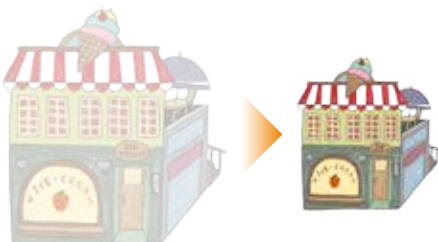


이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을 감소 변경할 때 영업장 설계도면을 만들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게 규제가 개선됩니다. 다중이용업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내부변경을 하는 데엔 추가적인 소방시설 변경이 없기에 규제 완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비용부담 및 편익 도모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 비용
: 100만원~150만원/건



개선 전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신규개설은 물론 신고 영업장 변경 즉 확장 또는 축소할 경우에는 영업장 설계도면을 첨부해 관할관청에 신고

개선 후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변경 없이 단순히 면적을 축소할 경우에는 영업장 설계도면 및 신고절차를 생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안전처, '14.9월 제출)

광고면적 늘어나니 전화기에 불납니다!

대전에서 무용학원을 운영하는 P씨는 학원 외부 창문에 홍보물을 부착했던 이유로 지자체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맞은편 건물에선 창문광고가 허용되는데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이쪽 건물에선 창문광고가 금지라니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P씨가 단속을 받은 이유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특정구역에서의 창문 광고를 자체조례로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 숨어있던 불필요한 광고물규제가 발굴·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간판 광고와 차량 뒷면 광고도 허용돼 자영업자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됐습니다.



- 자영업자 애로 해소, 광고물 산업의 활성화 기대



개선 전

법령과 상관없는 지자체 조례로 창문 광고 및 입간판 설치 금지
자동차·화물차의 옆면 1/2만 광고면적으로 활용 가능

개선 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창문 이용 광고 및 입간판 설치 가능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옆면 1/2과 뒷면 1/2까지 확대
시·도 광고물담당 회의 개최, 내용 전파 및 재발방지 안내 (행자부, '14.9월)

전통시장에 주차가 쉬워졌어요!

“잠깐 물건만 전달하고 오면 되는데, 과태료 걱정에 매일 전전긍긍입니다.” 지역 전통시장에 배달할 일이 많은 택배기사 P씨에게 주차는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입니다. 시장 주변에 주차공간도 거의 없는데 잠깐의 물건 배달로 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게 되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P씨는 걱정을 덜어도 좋습니다. 소상공인과 생계형 소형화물차량에 대한 과태료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평일 주차허용 전통시장을 늘리고 소형 화물·택배차량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등 전통시장 상황에 맞게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특히나 혼잡한 명절 연휴 땀 전국 전통시장에 한시적 주차 허용이 이뤄져 전통시장을 찾는 많은 이들의 편의가 늘었습니다.



• 전통시장 이용객 19.8%, 매출액 26.6%
증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개선 전

전통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단속

개선 후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허용을 확대해 소상공인, 택배운전자의 부담 완화
'전통시장 주차허용 확대, 주정차 허용 및 계도위주 단속' 공문 시달 (경찰청, '14.1월)

회사 눈치 안보고, 생계 걱정 없으니, 좋지 아니한가~

“인력소개소에서 사람을 불러 쓰기엔 비용 부담이 큼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형편에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음식점 사장 W씨는 예비군 훈련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06년부터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특정 지역과 시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까닭에 신청을 못하는 예비군이 많았습니다. 이런 실정을 반영해 수도권·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반기보다는 수요가 많은 후반기에 휴일 훈련 가능 인원을 늘렸습니다. 이에 영세 자영업자의 생업 부담이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대한 부담 경감 ('12년 대비 51.8% 증가)



개선 전

휴일 훈련 가능 인원을 2만5,000명 운영
특정 지역과 시기에 신청자가 몰려서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개선 후

휴일 훈련 가능 인원을 3만5,000명으로 확대
신청자가 많은 지역과 시기의 휴일 훈련 인원 비율 확대

2013년 휴일예비군 훈련계획 공고 (국방부, '13.1월)
2014년 휴일예비군 훈련계획 공고 (국방부, '14.1월)